

로서 소녀상 이전 문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적극 해명했다.

그러나 합의 내용을 두고 피해 당사자들과 지원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에서 반발이 이어지는데다, 위안부 문제의 본질과 여긔나는 일본 내 인사들의 발언도 잇따르면서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 조찬강연장서 흉기 습격··주한 미국대사 초유의 피습

현직 주한 미국대사가 반미 성향 운동가에게 피습당하는 초유의 사건은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2015년 3월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로 열린 조찬 강연회장에 참석한 길에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55) 씨에게 흉기로 습격을 당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7시40분께 헤드 테이블에서 강연을 준비하고 있던 리퍼트 대사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총 길이 24cm의 흉기를 휘둘렀다.

리퍼트 대사는 오른쪽 뺨과 아래턱에 길이 11cm, 깊이 1~3cm의 열상(피부가 찢어진 상처)을 입었고 흉기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왼쪽 팔 전완부(팔꿈치~손목)에 관통상도 입었다. 새끼손가락 등에도 찰과상을 입었다. 목 부위 경동맥 1~2cm 위까지 상처가 나는 등 자칫하면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심각한 부상이었다.

중상을 입었음에도 침착하게 행사장을 빠져나온 리퍼트 대사는 인근을 지나던 순찰차 편으로 강북삼성병원에 이송돼 응급 치료를 받았다.

이후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 유대현 성형외과 교수와 최윤락 정형외과 교수의 집도로 얼굴 상처에 80여 바늘을 꿰매고 왼쪽 팔 전완부의 신경을 접합하는 수술을 받은 뒤 여섯



▲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3월 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초청 강연에 참석했다가 괴한의 공격을 받고 피를 흘리며 행사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간 입원했다.

주한 외교 사절이 한국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위해를 당한 사례는 전례가 드물었다. 리퍼트 대사를 습격한 범인 김 씨가 지난 2010년 7월 시계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당시 주한 일본대사에게 저지른 시멘트 덩어리 투척 사건이 사실상 유일했다.

평소 활동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한·미 연합훈련 반대 등을 주장해 온 김씨는 한·미 키리졸브 훈련이 시작되자 앙심을 품고 리퍼트 대사를 염두에 둔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사법당국의 조사 결과 나타났다.

그는 민화협이 강연회 초청장을 받고 ‘남북 대화 가로막는 전쟁 훈련 중단하라’는 문구가 적힌 유인물을 만드는 한편 리퍼트 대사와 관련한 정보도 검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 체포된 김 씨는 살인미수와 외교사절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검찰은 이후 1심 재판 과정에서 “김 씨가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북침 전쟁연습으로 중단돼야 한다’는 북한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에 동조해 미국 대사에 위해를 가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2015년 9월 김 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부는 사건 이후 주한 외교사절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 한·미동맹 ‘전화위복’··사드 공론화, ‘과공’ 논란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이기도 한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으로 한·미동맹이 큰 타격을 입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었다.

그러나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든 것은 피해자인 리퍼트 대사 자신이었다. 불의의 흉기 피습에도 침착하고 의연한 태도를 보인 리퍼트 대사는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큰 대중적 호감을 얻게 됐다. 피습 사건에도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 많은 호응을 이끌어내며 동맹에 대한 인식 제고로도 이어졌다.

그는 수술 후 4시간 만에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한·미 동맹 진전을 위해 최대한 빨리 돌아오겠다. 같이 갑시다”라고 글을 올렸다. 퇴원하면서 연 기자회견에서도 한국어로 “비운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강조했다.

이후 리퍼트 대사는 피습 9개월여 만인 12월 18일 민화협 주최 토론회에 다시 참석, 못다 한 강연에 나서기도 했다.

리퍼트 대사가 입원한 병실은 한·미 고위 인사들의 위문 행렬이 이어지면서 ‘병상 외교’의 장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동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리퍼트 대사의 병실을 찾아 위로했다. 이완구 당시 총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 연합사령관 등도 병문안했다. 그의 쾌유를 기원하는 일반 시민들의 성원도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답지했다.

다만 지나치게 많은 인사들이 병문안을 오다가 하면 일부 시민들은 기도회·부채춤 공연을 열거나 애견가인 리퍼트 대

사에게 개고기를 전달하려 하는 등의 행동으로 ‘과공(過恭)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건의 후속 대응을 놓고 사회적인 논란도 없지 않았다.

여당이 피습 사건을 ‘중복 세력’이 저지른 일로 규정하고 안보 공세를 펴자 야당이 반발했다. 특히 여당 일각에서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었다.

정치권발(發) 사드 논란은 때마침 일정이 잡힌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 미·중 고위 외교 당국자의 동시 방한과 맞물리면서 더욱 가열됐다.

서울시립미술관은 9월 ‘예술가 길드 아트페어’에서 작가 홍성담 씨가 리퍼트 대사 피습 장면을 그리면서 범죄를 두둔하는 듯한 내용을 적은 그림 ‘김기종의 칼질’을 걸었다가 논란이 일자 철거하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

2015년 교육계의 가장 큰 이슈는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였다. 국정화 논란은 2013년 ‘우편향’ 논란을 빚은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싸고 수정명령 등이 내려지며 교과서 검정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시작됐다.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던 논란은 2015년 본격화됐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학계까지 치열한 찬반논쟁이 이어지면서 하반기 한국사회의 최대 쟁점 중 하나가 됐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 계획 확정

2015년 1월 당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교실에서 역사를 한가지로 권위 있게 가르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언급해 국정화 방침을 시사했다. 황 부총리는 이후 8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도 “필요하다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9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검정제도를 강화하거나 국정으로 전환하는 두 가지 방안을 모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0월 11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회의를 열어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을 논의했다. 다음날인 12일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 예고함으로써 한국사 교과서 발행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황우여 부총리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인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헌법 정신과 객관

적 사실에 입각한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국정화 결정 이유에 대해 “정부가 직접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고 역사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10월 27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역사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 세대의 사명”이라고 규정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1년간의 집필 기간을 거쳐 2017년 3월부터 일선 학교에서 사용하는 계획을 내놨다. 이로써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2011년 검정 교과서로 완전히 바뀐 이후 6년 만에 국정으로 회귀하게 됐다.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은 2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11월 3일 확정 고시됐다. 행정예고 기간 47만3천여 명이 의견을 냈다. 이 중 찬성은 15만2천805명, 반대는 32만천75명이었다.



▲ 정부가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확정 고시한 11월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서점 참고서 코너에 각종 중학교 역사 참고서가 진열돼 있다.

■ “좌편향” 때문에 국정화 필요” vs. “친일·독재 미화하려는 의도”

정부와 보수 진영은 현행 교과서의 광복 이후 정부 수립과 북한 관련 서술이 ‘좌편향’됐다고 주장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0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한국사 교과서 대부분이 1948년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으로, 북한의 ‘국가 수립’으로 각각 표현했다며 “대한민국 정통성을 격하한 서술”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의 80%가 편향된 역사관을 가진 특정인맥으로 연결돼 7종의 검정 역사교과서를 돌려막기로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당과 진보진영은 한국사 교과서가 국정으로 바뀌면 정권에 따라 서술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박정희 정권 때 발행된 국정교과서에 1961년 ‘5·16 군사정변’을 혁명이라 표현하고 “공산침략에서 국가와 민족을 건지기 위하여 일어난 것”, “국민을 부정부패와 불안에